

농산물 수입개방과 우리의 대응

단국대학교 농과대학
교수 김 동 희



최근 국민경제의 개방화에 따라 농산물의 수입개방은 미처 대응할 시간도 충분히 주지않는채 우리의 농업에 압박을 주고 있다. 농산물의 수입자유화율이 다른 공산품에 비하면 훨씬 낮은 69% 수준이라고 하지만 실제 「느끼는 수입자유화율」은 이보다 훨씬 높은것 같다. 왜냐하면 수입제한품목인 곡물 가운데 쌀과 보리를 제외한 밀과 콩, 사료곡물은 이미 자급율이 零에 가깝거나(밀) 보잘것 없는 수준으로 떨어지고 말았으며, 국내생산이 극히 적은 자유화 품목도 대체수요를 통하여 다른 품목에 충격파가 적지 않기 때문일 것이다. 따라서 농산물보호에 관하여는 수입자유화율이 높고 낮음이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제 수입에 대한 종합적인 정책이 어떻게 펼쳐지고 있는냐가 중요한 것 같다. 농산물수입을 크게 개방할지라도 EC 처럼 수입부과금과 같은 장치를 두거나 농업생산성을 높혀 경쟁력을 강화하면 농업을 지킬 수 있다.

최근 미국에 의한 농산물개방압력을 배경은 미국의 국제수지가 극도로 악화되어 세계제일의 채무국으로 전락한 데에 있다. 미국은 이를 만회하기 위하여 대미무역흑자가 많은 일본, 서독, 대만을 비롯하여 70억달러에 불과한 한국에 까지도 대미 수출제한, 미국상품에 대한 수입개방, 환율인상등은 갖 수단을 동원하고 있는 것이다. 환율인상을 하게되면 그 영향이 수출산업에 크기 때문에 정부는 농산물 등 국민경제에서 비중이 적은 품목에 대한 수입개방을 선택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면 여기서 문제는 단기처방과 장기대책으로 나누어 그 해결을 모색해야 하지 않겠는가. 첫째, 50억달러에 이르는 대미무역적자를 줄이고 동시에 대미무역흑자를 줄이는 방향으로 경제구조 및 무역정책을 과감히 펴나가야 하겠다. 이점으로써 일본서 중간재를 수입 가공하여 미국에 집중 수출함으로써 결국 줄기찬 압력과 간섭을 받게된 현재의 파행을 벗어나려야 한다. 둘째, 수출공업을 유지하고 더욱 발전시키기 위한 전략으로 농산물을 수입개방키로 한다면 그에 의하여 직접 간접으로 타격을 입게될 농업부문과 농민에 대하여 공평하고 적절한 보상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돼지고기통조림, 소세지, 그레이프프루트쥬스, 레몬쥬스 등의 수입개방은 곧 육류생산과 과일산업에 적지않은 충격을 줄것은 명백하다. 정책적인 보상에는 직접적인 방안 말고도 간접적으로 도리어 효과적인 방법이 있을 수 있다. 이를테면 이를 계기로 하여 국내 가공산업을 육성지원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시장수요를 확대하던가 관련 농민에 대하여 작목전환 또는 생산기반개량을 통하여 새로운 소득원을 열거나 수익성을 높힐 수 있도록 지원해 줄 수도 있다. 이러한 노력을 위하여는 먼저 정책의 불확실성을 없애야 하며 정부는 수입개방과 그에 따른 대책의 청사진을 미리 정하여 수혜자와 피해자가 이익과 손해를 공평하게 분배한다는 원칙을 밝혀야 한다. 농민과 그 단체들은 농산물의 수입개방은 대세이기는 하나 최대한으로 신중히 진행시켜 농업내부의 대응태세가 갖추어 질때까지 시간을 버는데 힘쓴다. 동시에 서로 협동하여 능동적인 자세로 국제화의 파도에 맞서는 준비를 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